제313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2013년2월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

부의된 안건

1.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1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3
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 1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4
1.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 14

(10시08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10시11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 아산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오늘 대정부질문 1번으로 나왔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소중하고 긴박하고 절실한 시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바뀌는 소위 국제적인 리더십의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새 정부 출범은 불과 10여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새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권부터 개혁되고 쇄신되지 않는 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처음부터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정치권의 자성과 성찰부터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은 곧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윤동주의 시구를 되뇌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정치인으로서 뼈를 깎는 각오로 새 출발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더 이상 깎을 뼈가 없을 정도로 국민 앞에 민망하고 송구스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 2개월여 이 엄정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 우리 국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민생과 정치혁신, 쇄신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약속한 정치쇄신특위, 민생특위라도 가동을 해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에 돌입해야 합니

다.

다음으로 국회 운영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끊임없는 정쟁과 우리가 말하는 구태정치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감히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정치 개혁, 진정한 쇄신 없이 국정 쇄신과 국정의 성공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정부에 걸맞은 냉철한 자기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바로 이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식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무총리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위기를 맞아서 그러한 경제 문제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또 G20 정상회의라든지 핵안보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중심의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성과들이 서민들에게 고루 미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소통의 노력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은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진솔한 평가는 이제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총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를 선택한 것이고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새 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바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권교체는 단순한 시간적·계기적 교체가 아니라 뭔가 국민적 기대와 행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달라는 역사적·시대적 흐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이 정권교체기를 맞아서 새 정부 출범의 성패를 가름하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신구 정부간 인계인수 과정입니다.

총리님,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과 각 부처의 인계인수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의 정부는 신정부에 인계인수 작업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의 인수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각 부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다음 정부에게 인계할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도 지금 계속해서 각 부처가 마무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계인수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본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계인수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의 어떠한 지시나 당부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에 국무회의 등이라든지 국가정책조정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몇 번 강조하는 것은 다 서류상 명백히 남아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명수 의원 실제 제대로 인계인수 작업이 되고 있는지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무총리 김황식 인수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보고사항을 들어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더 보충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인계인수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깨끗하게 책상을 청소해서 비워 주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차제에 이런 관례를 끊고 실질적인 인계인수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특히 현 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주요 정책이나 시책이 어떻게 인계인수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행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련 자료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장관이나 차관이나 총리는 바뀌지만 고위공직자들이나 실무 직원들은 그대로 계속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인계도 이

루어지지만 또 특별히 총리나 총리실장이나 차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인수위 보고 과정이라든지 또 총리실 내부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각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인계인수가 철저하게 되도록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4대강 문제라든가 자원외교 문제,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인계가 되어야 새 정부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꼭 좀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아베 내각이 출범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이게 강조되는 시기인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전담위원회가 총리 소속으로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이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한 결정,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총리실에서 폐지하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법률에 의해서 2012년 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1차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그 동안에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 총리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을 제가 발의해서 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법률 이전에 정부 자체가 우선 이 위원회의 폐지를 미리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해서 그것에 맞게 지금 위원회 시한이 연장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로서는 법률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일응은 그걸 정리를 전제로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정부는 또……

○이명수 의원 법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의 방침이나 결정이 먼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새삼 책임총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해 오셨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책임총리' '책임총리'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헌법상이나 법률상의 개념도 아니고요……

○이명수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국가 기능이 아주 넓어지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에게 상당 부분 그러한 권한들을 좀 이양을 해서 총리가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런 과정에서 헌법에 정해진 국무위원의 제청권이라든지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는 그야말로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총리가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국정 부분을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총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상당 부분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앞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시대가 열리는데 책임총리론과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새 정부 국무총리께 여기에 관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책임총리하고 세종시 시대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그야말로 내각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중심으로 해서 총리가 책임을 진다, 물론 그런 쪽에 더 역점을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에 잔존해 있

는 그런 부처들이 많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부가 이렇게 분할해서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총리가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챙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더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보다는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은 북한 핵 관련 질문입니다.

현 정부가 새 정부에 여러 가지 인계인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핵 등 안보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인계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총리님,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총리님이 파악하고 계신 북한 핵실험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된 소위 보다 진전된 형태의 핵실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직은 불확실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의 핵실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력이 강화된 그런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은 결국은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이어받으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결속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같은 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로서 그리고 다음 정부로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재검토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의원 이미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핵실험 동향이나 북한 군 동향에 특이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모든 가능성을 두고 정부로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갱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빈틈없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2006년, 2009년 1·2차 핵실험과 이번 정부의 대응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 중국에 협조를 구하고 안보장관회의 소집하고 그 다음에 강력 대응 천명하고 그 외에 별다른, 뭐가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갖고요.

정말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 핵 도발을 제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점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북 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트랙, 즉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이 강고한 입장을 유지·존속시키는 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사태를 맞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차기 정부가 더 변화된 상황·환경에 따라서 보다,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이제 정말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까지 핵 무장을 서두르는데 유사시 미국 핵우산과 북한의 핵그늘 아래 우리만 아무런 수단 없이 손 놓고 입으로 협조와 대응을 해야 하는 잘못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순간 일치될 때 우리만 외톨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핵에 대한 대북정책 기조와 대응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철저하게 인계인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아울러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 최첨단 공중정보수집 문제 이런 근본적인 국방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계되고 새롭게 검토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옳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하나 저희가 챙겨야 할 것이 북한의 장사정포 문제입니다. 사실은 북한 핵만큼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장사정포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고, 안보가 없으면 복지도 있을 수 없지요.

장사정포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하는 게 10년 전부터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다…… '지난번에 국방예산이 삭감돼서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저희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핵미사일 공격입니다.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 국회에서 국방예산이 좀 삭감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분야보다도 국방예산을 확충해서 방위력을 유지·개선시키는 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필요한 전자통신 안보시스템이라든가 요격 섬멸 미사일체제 대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몇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새 정부에 진솔하게 그리고 긴급한 현안으로 꼭 이 문제도 인계가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진정한 안보는 국민의 안보의지에서 비롯됩니다. 통일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우월성을 실증해 주는 일입니다.

총리님,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200명을 넘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재입북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뭘 했느냐? 걱정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 특히 국군포로로 북쪽에서 고생하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온 이탈 국군포로와 그 자녀들의 보호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총리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이탈주민이 재입북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북한 측의 공작도 있고 또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우리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그동안에 작년 1월 이후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여덟 번 개최를 해서 재입북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에 질의하신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관한 문제는 제가 그 질의를 듣고 또 국방부 측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했는데 다만 우리 국내에 있는 기존의 보훈가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검토가 나와서 구체적인 그런 조치를 지금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보훈가족 처우하고 반드시 그렇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 그런 것을 미리 주셔야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대로 국정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작은 증좌가 되는데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그런 게 조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뭔가 가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누군가 보좌하고 챙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에 인계인수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인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현 정부가 중장기적인 국가의 핵심전략을 어떻게 다음 정부에 넘기느냐 이것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0년대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가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 인계해 줄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작년 12월에 기재부장관이 주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들은 당연히 인계가 될 것이고요. 그밖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하는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서 구체적 위원회가 세운 그런 중장기 계획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음 정부에 인계될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 제가 파악하고 알아본 바로는요 기재부에서 만든 그 정도의 국가 그것을 비전과 중장기 전략으로 내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정부 부처에 각 부처에 알아보니까 10년 단위 계획도 제대로 준비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육성계획 이 정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20년 30년 심지어 100년 단위 국가 비전과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중장기 비전과 전략은 있는데 우리 정부에 제대로 된 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게 있다면 이 북한 핵문제 대응이나 우주개발사업, 기초과학 여러 가지 진흥사업이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과 혼선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크게 일관성 있게 안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그것을 되도록, 수립하도록 인계해 달라 그 말씀이고요.

얼마 전 우리가 중장기 우주개발계획에 의해서 나로호 발사를 했다라면 나로호 성공을 훨씬 앞당길 수 있던 거예요. 정부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개발계획을 바꾸고 혼선을 주니까 제대로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GDP 1인당 2만 달러가 넘었지요? 4만 달러 달성하려는 국가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세운 게 지난번에 지난해에 세웠던 중장기전략보고서가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부실해서……

○이명수 의원 미흡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부실하다는 지적은 물론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전략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사항들은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수 의원 필요하다면요 국가기획원이나 전략원 이런 국책연구소라도 만들어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전담해서 계속 수립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인계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21세기는 정말 전략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점점 높아지고 미래 예측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나라를 움직이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연한 말씀이지요. 정부에서 그와 같은 중장기 계획·전략을 세우고 또 그것은 정부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연연, KDI라든지 각종 연구기관의 용역이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죽 세우고 이렇게 또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 주로 현안 위주로 움직이는, 현안에 매달리는 이런 국정 운영 다음 정부에서는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총리님, 현재 세종시 신청사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불편함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불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특히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최근 언론 보도와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보니까 또 공무원들을 만나 보니까 부실과 그 불편함이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부실공사, 여러 가지 주차장 불편함, 출퇴근 문제, 정주여건 문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민원인 불편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신설되는, 정부조직이 이제 개편되면 정부 부처가 새로 신설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이 부처 청사는 어디로 갈지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세종시에 내려왔다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는 공무원들의 고충 누가 헤아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다 된 상황인데 왜 누군가가 미리 못 챙기고 지금에 와서 그런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밖에서 보는 공직자들은,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근무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주거시설이나 많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겠느냐, 자기 근무여건도 제대로 못 갖추고 부실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느냐 걱정이 많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총리님께서 직접 챙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제대로 보완하고 수정하고 빨리 불편함과 부실함이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실에서 공무원들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개선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10여 년 이상 전에 대전에 청 단위들이 전부 이전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기존에 도시기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청사도 다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일거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일부 건물 지어서 들어가면서 또 짓고 또 순차로 가고 이와 같은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코 행정부나 공무원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조급하게 빨리 세종시로 옮겨라 이와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회나 정치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치권의 잘못과 그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 부실함과는 별개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의 어떤 상황 판단이나 인식에 소홀함이 있을 테고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는 정치권과 관계없이 행정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고치고 보완하고 점검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소홀함이 생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현장에서 생기는 불편은 다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가령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불편함이라는 것은 또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이명수 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명수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도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국정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박근혜 새 대통령과 정부에는 5년 후 국민행복시대와 국민통합시대를 제대로 이끌었다는 성공한 정부로 기억된다라는 국민의 기대가 가득 서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역사적 소명도 있습니다.

오랜 겨울 추위를 뚫고 다가오는 새 봄의 기운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100% 국민행복시대가 새 봄의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인계인수 업무는 더욱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촛불시위로 정권을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촛불시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무고한 시민 1500명 이상이 불법체포·구금됐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여야 간의 대화는 실종되고 이명박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 의해서 예산안과 미디어악법과 한미FTA 등 무려 107건의 안건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참담함 속에서 이 무도한 이명박 정권 언제 끝이 나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실패한 정권, 그것도 철저히 실패한 이명박 정권,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천 번 만 번 사죄를 해도 부족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언론과 퇴임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 의원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그 사항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대통령은 자화자찬 하는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빈부격차 개선 성과가 가장 좋고 중산층도 줄지 않았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가 2008년 5배에서 작년에 7배로 늘어났습니다. 가계 부채는 2008년 856조에서 1135조 원 됐습니다. 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국민의 절반도 되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5.5%나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 국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 무슨 망발입니까?

자, '고소영 인사'라는 비판에 동의 못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사가 '고소영 인사'라는 데 대해서 총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화면 보시지요.

임기 5년 동안 장관급 인사 68명 중에서 35명 52%가 '고소영'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36명 중에서 23명 64%가 '고소영'입니다. 5대 사정기관장 12명 중 8명 67%가 '고소영'입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을 보고 인사했다고 하는데 인사에 실패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김태호 국무총리, 정동기 감사원장, 이동흡 헌재소장후보자 등 9명의 낙마 사유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능력입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능력입니까? 위장전입 잘하는 능력입니까? 경비 유용하는 능력입니까?

이런 대통령과, 물론 총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는 것, 일했다는 것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자,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의 숱한 잘못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에도 나오지만 4대강 사업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4대강 사업, 국민들의 70%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계 부실, 수질 악화, 유지·관리 비용 과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것 잘하는 일입니까?

양건 감사원장이 화면에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감사원장 지내셨는데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요?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못 믿겠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법원의 판결을, 이 정부의 행정조치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지요.

자, 민간인 사찰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전혀 모르는 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찰 관련 문건에 'BH 하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VIP가 최종 보고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는 국가인권위마저 청와대의 불법 사찰 개입을 확인하면서 대통령에게 사찰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사죄하기는커녕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신문에 난 것을 파일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아니, 사찰이 신문에 난 것 파일링한 겁니까, 아니면 사찰한 것이 신문에 난 겁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정치적 거물을 사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사찰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지시했고, 보고받았고, 알고 있었고,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총리!

노무현 대통령 왜 돌아가셨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태광실업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기획 세무조사를 시키고, 그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광실업만 세무조사 했다면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정화삼 씨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도 세무조사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리수술 받은 우리들병원도 세무조사 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토속촌'이라는 일개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 했습니다.

취모멱자(吹毛覓疵)라는 사자성어 아시지요?

머리카락을 불어 가면서까지 작은 허물을 찾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서 그래 노무현 대통령 수사, 민정수석에게 김해 방문조사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청와대 버스 보내 줬다고요?

이런 뻔뻔함의 극치,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이런 동시대에 이런 대통령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검찰, 또 어떻습니까?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 마구잡이 수사했고, 그러나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충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당선인조차 검찰 개혁을 공약했겠습니까?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 일차적으로 검찰에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야당과 비판적인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명박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까?

도덕이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지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지요, 총리?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동철 의원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33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떨어져 가지고 45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반부패 기술을 전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가르친 나라는 45위, 가르침을 받은 나라는 33위, 이 얼마나 국제적 수치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가 이룩됐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지금도 정치군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피와 눈물에 의한 민주주의가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치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피와 눈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그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 준 그 국민들을 탄압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억압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기처럼 당연시했던, 그래서 국제사회의 칭송이 자자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앰네스티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말해.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야!

(장내 소란)

그런데 뻔뻔하게 측근들하고 사돈을 사면해요? 그리고 자신이 무궁화장을 받아요?

측근들, 사돈의 범죄를 사면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사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측근과 사돈을 사면하라는 법과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박근혜 당선인조차 반대했던 특별사면, 그 이유, 그 진짜 이유,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대선자금 비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면을 단행했다라는 그런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김동철 의원 안 되십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일괄해서 죽 질문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일간지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개선에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터뷰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밑으로 파급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친서민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거나 서민금융이나 또 교육이나 복지 확장 등을 노력했고, 다만 대통령께서 빈부격차 개선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니계수가 2007년에 0.312인데 2011년에 0.311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김동철 의원 총리, 제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서 반론이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지니계수가 개선된 것을 반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산층이 줄지 않았다 하는 것도 중산층이 1909년에 66.9%, 2010년에 67.5%, 2011년에 67.7%로 조금씩 늘어나는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김동철 의원 그런데 국민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대기업이나 잘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잘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작용하고요. 언제든지 과거보다는 현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주관적인 요소를 감안한

다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일응은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소영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 초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초기에 그와 같은 고소영, 강부자라는 네이밍하에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인사 행태가 이루어졌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한다고 하지만 소망교회로서 정부에 진출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까지도 소망교회 교인이다 뭐 이런 것을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에 결혼식의 축의금 내러 간 일밖에 없습니다.

○김동철 의원 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와 같이 소망……

○김동철 의원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사실에 입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소망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회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김동철 의원 아니, 그만큼 소망교회에 다니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억지로라도 소망교회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것을 수치를 왜곡해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고려대학 출신의 경우에도 실제로 통계를 해 보십시오, 과거의 정부하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려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오히려 역차별받았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남이라고 하지만, 물론 주변에 눈에 띄는 인사들이 영남 중심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계를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부터 그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고소영, 강부자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동철 의원 제가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표를 다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경우도 뭐 소망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 것처럼 그 자료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건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태풍이나 가뭄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일어났고 다만 그것이 안정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성과의 객관적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원 결과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감사원 결과를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원장을 했고 감사원이 얼마만큼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는 집단인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정확히 읽어 보고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내용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말하자면 보의 안전성이 문제된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감사 결과는 보 자체의, 보 본체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고 바닥 공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준설도 이것을 200년 빈도로 할 것이냐, 100년 빈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견해 차이의 문제이고, 수질도 BOD나 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COD를 좀 고려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지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보도자료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보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수질은 악화됐고 비용은 많이 드는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작성되는 바람에 언론에서 이것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를 했고……

○김동철 의원 아니, 어떻게 언론을 탓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언론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고 야당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장께서 '우리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김동철 의원 아니, 감사원장의 다른 말은 안 보시고 그것만 보셨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자……

○김동철 의원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다는 것 안 보셨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감사 결과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에 의해서 국민들로서는 이 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굉장한 불안감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국에 우리가 12조 상당의 물 관리 사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많은 환경단체들이, 태국의 환경단체 또는 요로에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다만 상당 부분이 왜곡되거나 과장, 침소봉대됐다는 사항하고.

따라서 우리가 아무 말썽 없이 다 완성됐다, 성공됐다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학회 등을 통해서 제삼자로 하여금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챙기겠다 하는 취지이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리가 다시 재검증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고 아마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지는 않았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고,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내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김동철 의원 거물급은 없다면서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동철 의원 거물급 사찰 안 했다면서요?

○국무총리 김황식 일응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수사 결과에서 발표된 내용만을 저는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수사 결과에 의해서 고용노동비서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에 청와대의 하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말하자면 대통령의 하명사항이라기보다도 수사 결과에서 지적한 고용노동비서관이라든지 밑의 실무자급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찰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을 정리한 것이지 그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 사찰을 했다 하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김동철 의원 총리, 제가요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사면복권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제기관에서 한국의 인권문제 지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치 않으시니까 제가 보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물러나는 총리로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참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러면 그 말씀만 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이 정부에서……

○김동철 의원 제 질문 중에 객관적이 아닌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달리 해야 될 정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철 의원 그만 들어가십시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이야기하기에는 15분은 너무 짧습니다. 15분이 아니라 15일을 준다 해도 국민의 지친 목소리, 성난 민심을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4대강 사업,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의 참회록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1시09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조명철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심재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개선 촉구 결의안과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는바, 이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히고,

둘째,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 체제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확실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한구·박기춘 의원 외 27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수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됨에 따라 양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양 교섭단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087호 및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금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하고 다각적인 노력과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금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박기춘 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이한구·박기춘 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한구·박기춘 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강창희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조명철입니다.

(강창희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재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김정일 유훈이 생각납니다. '핵을 개발하고 그 힘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후 통일하라',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김정일의 유훈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 독재정권은 수백만 명을 한순간에 살상할 수 있는 살인무기를 손에 들고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핵 참화를 미래세대에 넘겨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나서서 지금 당장 그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내서 평화로운 세계를 후대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굶주린 북한 인민들을 내팽개치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핵과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이 광적인 북한 독재정권의 이러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불장난에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독재정권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불장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단호한 응징의 철퇴를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야 지도자들과 대통령 당선인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준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를 풀어 주는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동료 의원, 선배 여러분!

북한 독재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로 주민들에 대한 폭정과 인권 유린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질병 등 지옥 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국회에서 공전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는 상임위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는 탈북자의 재입북, 탈북자 간첩사건 등으로 탈북자 사회가 크게 혼돈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관리시스템의 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탈북자 사회가 위축되고 남한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이 정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한반도를 둘러싼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핵 문제, 외교·안보 문제를 질문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할 말씀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아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파탄이 났고 정치는 엉망이고 그리고 또 외교·안보 포함해서 어느 하나 잘된 것 없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그런 찬사, 또 가장 어려운 금융위기 시기에 우리가 겪어 낸, 우리 국민과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겨 낸 이 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명박 정부의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것입니다. 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 더욱 그 점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국민들의 눈에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정부에서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적절치 않아서 그냥 참겠습니다.

○조명철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북한의 핵 개발은 개발과 대화와 또 다른 실험과 제재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국무총리 김황식 반복됩니다.

○조명철 의원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면 유엔 제재가 들어가지요? 유엔 제재가 들어가면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핵실험을 해요.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재가 강화되겠지요? 강화되다 보면 또 '아니, 대화가 실종되지 않느냐' 또 '평화적인 인센티브 수단을 왜 쓰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대화가 또 진행돼요.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논쟁이 더 점증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북한이 또 박차고 나가요. 그러면 또 미사일 쏴요. 또 제재가 강화되겠지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과정이 3차에 걸쳐서 반복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과거와 같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간 진행돼 오는 말씀하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핵실험이 상당

부분 그래도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는 관련 우방국 내지는 안보리 차원에서 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결코 북한의 핵 개발이 성공할 수도 없고 그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철 의원 과거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총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제재를 강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한편으로는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또 반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결과는 뭐냐 하면,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과는 뭐냐?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신뢰는 실종이 됐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질·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를 보면 이것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논쟁이 훨씬 더 폭증이 되고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그래서 결국은 또 뭐냐? 그것 우리 책임 아니냐, 이런 자학으로 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발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은 명백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어프로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근자에 언론에서 핵보유 선언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는 하되 모든 사항들을 포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만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포용정책을 취하나 강경한 대책을 취하나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간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북한에 상당히 끌려가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보여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차제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조명철 의원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명철 의원 지금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의 핵 개발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국방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빈자리가 많아요. 미사일 개발된 숫자가 실전 배치,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빈자리가 많고 특히 지금 핵실험이, 이번 핵실험은 플루토늄보다 우라늄 원료를 이용한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라늄이 지금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고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디에 산재해 있고 인력은 얼마나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자료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언급이 있잖아요. 수소폭탄 실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폭탄 실험이면 하나는 수소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초중수소, 이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것들을 생산할 시설이 있을 것이고 없다면 수입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를 얼마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조명철 의원 이번 핵실험에서 또 하나 걱정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이 핵실험이 6~7kt 규모의 핵실험이다라고 발표했단 말이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명철 의원 그런데 해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40kt이다, 러시아는 최소 7kt이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TNT 7kt이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실태를 축소해서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물론 나름대로 진도라든지 이런 것을 탐지하는 위치나 또 그 방식에 따라서 국가 간에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을 축소시킬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그것을 늘릴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이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지 일부러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명철 의원 예, 믿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 이런 것들을 저지시키기 위한 우리 수단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어떤 경제제재 이런 것들을 가하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명철 의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 협상,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운운하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명철 의원 그런데 지금 중국의 어느 정치학자가 얘기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게 중국을 기본적으로 겨냥해서 말씀한 것인데 '국제사회는 어느 때든지 제대로 된 제재와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다면 페이퍼상에만 있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비롯한 우방국들의 또 6자회담 회원국들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철 의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 공멸과 같은 끔찍한 참화로 들 수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과거처럼 또 제재 한 번 하고 대화해 주고 그러면 다시 또 개발하고 발사하고 하면 또 강도 높은 얘기 하다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좀 확실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가, 제재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번 정부가 추가적으로 뭐를 어떤, 다음 정부에 넘길 수 있는 그런 큰 경험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결국은 우선 국제사회의 제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제재 강화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성환 외교부장관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회의의 의장으로서 참석을 하고 오늘 새벽에 오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2월달에 의장국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말하자면 과거와 다른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져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모면하고 피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보다 강력한 그러한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안보리 차원과는 별도로 우방국들이 양자 간에 있어서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국가들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명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군사력 균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균형입니까, 균형입니까,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철 의원 그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러나 비대칭 전력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명철 의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같은 이런 만행을 감히 저지를 수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을 했고 천안함을 했다 그렇게 꼭 연관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명철 의원 그러니까 그들의 도발의 행동이 대단히 오만하단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조명철 의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도발의 행동이……

○조명철 의원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오만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조명철 의원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대화도 안 나오고 오히려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가하는 오만방자한 이런 행위들이 지속된단 말이지요.

그 이면에, 그 배경에 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핵이 없을 때에도 오만한 도발은 있었습니다.

○조명철 의원 이렇게까지 우리 국토에 포탄을 퍼부은 행위는 일찍이 없었단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철 의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대칭 전력을 균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합니다.

○조명철 의원 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조명철 의원 비대칭 전력, 북한의 핵전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명철 의원 그러면 외교 당국이 할 일이 많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명철 의원 우리 핵 재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공인된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명철 의원 그러면 외교 당국이 얼마나 많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난번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향상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미 원자력협정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명철 의원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이 비대칭 전력의 현 상황은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하고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우리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대칭 전력, 불균형을 균형화하기 위한 미국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뭐가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우리가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확장억제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억제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명철 의원 본 의원은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제력 확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조명철 의원 뭐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도대체 북한의 체제가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대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철 의원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체제가 변해야 된다, 체제가 변하지 않고서는 태도를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밖에서 그림을 그려 주는 것만으로 태도 변화를 유도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체제의 성격이 변하도록,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정권으로 가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외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현실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저는 남북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철 의원 이번에 추진되는 제재가 중국의 실질적인 참여, 북한에게 정말 자극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의 노력이 좀 배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철 의원 감사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북한 핵도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되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남북이 재래식무기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한반도 핵무장은 결국 민족의 공멸을 가져다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북한 독재정권에게 이번의 핵실험 강행이 소탐대실이, 치명적인 실수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확고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되는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인 역량을 모아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냉정하고 의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조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김영삼 정권을 닮았습니다. 93년 쌀개방 문제로 파동을 일으키더니 19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로 정권을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해서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3차 핵실험 사태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997년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2012년 국정원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영삼 정권의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습니다.

김황식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님, 오늘 훈장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요?

○정청래 의원 오늘 안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훈장 안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청조근정훈장 안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안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언제 받으실 예정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보도에는 받았다고 나왔던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잘못된 보도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명박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무궁화대훈장은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훈장 받을 일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역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든 대통령님들이 임기 초기 내지는 임기 말기에 다 국가원수로서 그와 같은 훈장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국가를 이끈 그 공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께서는 법관을 오랫동안 지내셨습니다. 법관의 양심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은 무엇이고 잘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잘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겸손치 못한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기왕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청래 의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세계 경제위기를 외국에서 리커버리 텍스트(recovery text), 모범적인 회복 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문제하고 또 무역 2조…… 1조 달러를 연속 이태 계속해서 달성을 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965년에 해외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65년 이후 지금까지 작년에 5300억 불에 이르기까지 수주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5300억 불 중에서 52%를 이 정부에서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알겠습니다.

잘한 것 세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잘못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와 같은 경제성장의 효과가 서민층, 중산층에 잘 파급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소통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인하는 이런 것보다도 대립이, 갈등이 더 심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정치는 파국 났고 경제는 파산했고 남북관계는 파탄 났으며 언론은 파괴됐고 노동자의

삶은 파멸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아 봤습니다.

경제성장률, 참여정부 때는 5.1%에서 이명박 정부 2%, 1인당 국민소득은 참여정부에서는 9532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1088달러, 세계 경제 순위는 13위에서 15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국가 채무는 299조에서 445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경제성장률 747의 목표는 결국 7% 성장이 아니라 2%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아니라 2만 3000달러, 세계 경제 순위 7위가 아니라 15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성장률은 세계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 살펴야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말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좋았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GDP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가 채무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금융위기 등 사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채무액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변함이……

○정청래 의원 총리, 결국 747 공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74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경제하고 영향이 관련된 문제……

○정청래 의원 결과적으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경제 7%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만 불 목표는 이 정부 끄터리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였고 7위도 10년 후를 목표로 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4만 불과 7위를 달성하겠다 했던 취지는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 저는 총리께서 아직 훈장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훈장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너무나 잘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나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요, 주가 5000 얘기했다가 고쳐서 주가 3000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주가지수가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 김황식 2000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공약한 것 못 지켰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공약이라기보다도 그런 목표로 하겠다는 거지, 4만 불이나 7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그와 같은……

○정청래 의원 자, 잘하겠다고 했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열흘 동안 그러면 잘해서 747 공약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공약을 못 지킨 건 사실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747이 공약이 아니라니까요. 4만 불은 명백히 한나라당 공약집에……

○정청래 의원 그러면 공약이 아니고 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건 국가의 비전, 목표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그때로부터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4만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지금은 3만 불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나 세계 경제의 사정으로 인해서 3만 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차라리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나는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 의원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한이 또 예기치 않게 이런 도발을 해 와서 상당히 고뇌가 많으실 줄 압니다.

장관님은 이 통계를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책임이 있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연결 선 하나 없이 다 끊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개성 관광객 0명, 35만 명에서 0명, 이산가족 상봉 참여정부 때 3613명에서 0명, 다른 말로 빵 명이라고 그럽니다.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참여정부 때 39건에서 0건, 남북회담 개최 건수 55건에서 빵 건,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 때문에만 이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남북관계라는 것은 양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도발과 핵개발에만 열중하면 대화와 교류 협력은 당연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남북관계가 이처럼 경색된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핵을 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의 정책 탓으로 돌리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호 간에 호의로, 선의로 임해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의원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남북관계 교류 평가지수, 통계 수치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남북관계 교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정책성과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자, 1차 핵실험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없지요? 중국, 미국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정부가 하는 일을 구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남북 간에는……

○정청래 의원 구걸외교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그러한 채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교신을 하는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쉬운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퍼주기 해서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퍼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식량 차관도 전혀 안 주고, 그런데 왜 두 번이나 핵실험했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느 정부 때 몇 번을 했고 또는 어떤 형식으로 했고가 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 자, 장관님, 어제 그제 외통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이 핵을 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점을 인정하셨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정권의 자존심보다는 민족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인내하면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하는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 있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그것도 동의합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류우익 예.

○정청래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단호한 대처와 제재는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또 도발적인 언동을 계속해 오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오는 대신에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한다면 거기에는 대화보다는 제재와 다른 필요한 조치들이 행해 져야 될 겁니다. 즉 대화만이 절대……

○정청래 의원 제 말씀은 제재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화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장관 류우익 물론입니다.

○정청래 의원 한 손에는 강경, 한 손에는 온건 2개의, 양쪽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류우익 온건책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강경 정책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정청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군요.

외교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몇 가지는 여쭤 보겠습니다.

뉴욕의 인터뷰를 보니까 "제재 목표 수위가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이라든가 핵을 개발하는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그런데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닉쉬 상임고문의 말에 따르면 실지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손목을 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중국도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의원 우리와 미국은 가치동맹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혈맹관계인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저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외교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G2 국가의 하나인 중국과 매우 중요한 우리의 외교 대상을 정했어야 되는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나 몰래 추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지금 면구한 입장 아니냐, 중국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도 다 통보를 했고요. 한일정보보호협정 때문에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협정을 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바로 손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석유 제재가 강력한 수단이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추정을……

○정청래 의원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의 석유를 끊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는 참여정부의 특사를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북한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도 한중 간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이 자기들이 날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정보에 관해서도 다 한중 간에 상당히 공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장관님께서는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이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3차 핵실험에 대한 이런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우리가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소홀했다, 너무 미국 중심으로 끌려간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심기가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부탁하는 북한 제재에 대해서 동참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그렇게 심기가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중 간에 그동안 나타난 수치를 보면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긴밀한 무역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전이 됐다고 생각하고……

○정청래 의원 적어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의 한중 관계보다 지금의 한중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못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더한 것도 없지요,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 미국의 핵물리학자, 권위적인 핵물리학자인 헤커 박사가 3NO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의원 No More No Better No Export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헤커 박사가 지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100% 다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국정원에서도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히 계속 1차·2차·3차 때 말씀드리지만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핵실험도 대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부든 통일부든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800명이 그냥 출퇴근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것이 대남용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대남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 출퇴근하는…… 꼭 그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통일부장관에게 여쭤봐야 되지만 외교부장관께……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 빨리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개성공단은 또 그 개성공단을 위한 양측 간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9·19 선언은 종말을 고했다 북한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어쨌든 9·19 정신을 계속 불씨를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의원 9·19의 3대 정신이 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9·19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또 나머지 나라들이 줬고 북한이 현재 외교관계를 갖지 못한 나라들과 또 외교관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평화체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9·19의 세 가지 핵심이 비핵화, 북·미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레벨은 달라졌지만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9·19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저는 9·19 정신이 나오기 전에 6월 17일 정동영·김정일 면담에서, 다섯 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9·19 성명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안보주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냈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번 북핵 위기를 맞이해서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이 대북특사단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 그리고 북한과 많이 접촉한 여러 자산이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주청할 용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우리

가 대북특사를 보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한 가지 현안만 묻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청래 의원 통상기능 떼어서 산자부에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외교부는 지금과 똑같은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에서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청래 의원 외통위에 나오셔서 결기 있게 헌법까지 거론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때 제 입장을 다 말씀드렸고요.

○정청래 의원 지금은 꼬리를 내린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총리님,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총리님께 조금 껄끄러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국정원의 대선 선거 개입 의혹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경찰은 왜 발표하지요? 대선토론회 있는 그날 긴급속보로, 그거는 잘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때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발표가 있었는지 하는 그 전후 사정을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국무총리란 국가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총리가 아니시네요, 그러면? 반총리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재난과 관련된 문제는 즉각즉각 되지만 그와 같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상식적인 것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2차장·3차장 업무가 뭡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

○정청래 의원 1차장은 뭐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대북관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정청래 의원 해외정보.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2차장은요?

○국무총리 김황식 ……

○정청래 의원 국내정보.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3차장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대북정보.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그런데 3차장 산하에 대북심리전단 67명이 업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인 사이트에 와서 대북첩보 수집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국무총리 김황식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정청래 의원 거기는 깔깔깔, 껄껄껄 웃는 사이트입니다. 종북사이트라고 규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국정원 이 여직원이요, 11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요. 9시 반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고. 그리고 11시부터 2시까지 흔적이 없어요. 이 여직원은요, 알바까지 동원했다는 의심이 있어요.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40대 무직인데 45세, 월세를 18일이면 꼬박꼬박 넣었답니다.

대북첩보를 수집하는, 대북 심리전을 했다는 제3차장 소관에서 대남 심리전 한 거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면 계속 더 여쭤 봐도 모르시겠네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

(「중요한 사건을 모르십니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흥분할 사항을 총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보고도 못 받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시간과 더불어서 그것은……

○정청래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질 사항입니다.

○정청래 의원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가 상식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청래 의원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중인 사건을 국무총리도 말을 못 하는데 수사도 하기 전에 대선 TV토론이 끝나자마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온갖 지상파·종편 TV 자막으로 다 긴급속보로 띄워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잘 했는지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잘 했는지는 온데간데없고 국정원 사건 수사 발표였어요. 이게 저는 이것도 대선 개입이고 불법·부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옳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으면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파악한 사항으로서 중간적인 파악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그렇게 발표할 만한 충분한 확신과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 그런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정청래 의원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수가 영희네 집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랬으면 영희네 집에 가가지고 유리창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철수네 집에 가가지고 돌 없다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에 바로, TV 토론 이후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총리께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잘못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상황관계가 명확해질 것이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잘못했잖아요! 경찰이 잘못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정청래 의원 저는 이명박 정권 퇴임 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 보냈듯이 BBK 청문회, 국정원 청문회, 언론 장악 청문회, 4대강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때 총리께서도 참고인으로 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책임을 져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의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의를 지켜서 경청 좀 해 주세요.

교육부장관님,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등록금 절반 위원회 위원이셨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제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런데 그 표현은 '반값등록금'으로 표현됐지요? 지금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반값'의 뜻이 뭐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500만 원이면 250만 원 내는 것이 반값 아니에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다가 그 부담을 250만 원을 줄여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청래 의원 지난해 예결산특위에서도 저랑

이것 가지고 설전을 했는데, 반값등록금이라고 이명박 대통령도 김형오 당시 대표도, 박근혜 후보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장학제도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정청래 의원 그런데 지금 이주호 장관께서는 부담 줄이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값을 얘기하세요, 값.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록금 고지서에 500만 원이면 장학금이 250만 원으로 찍히면서 실제로 내는 돈이 250만 원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다음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합정동 홈플러스 문제 제가 작년 7월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리께서, 임기 열흘 정도 남았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글쎄요, 지경부하고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회의를 6차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 해당 부처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채근을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는 카라반들은 모래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섰다가 모래 바람이 끝난 다음에 나침반을 들고 다시 방향을 잡고 간다고 했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석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병석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대정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이 다 중요하지만 의원들로서는 의정활동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북 문경·예천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은 전 세계가 평화가 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세계를 향한 야만적인 평화 파괴행위이며, 전 인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도발행위입니다.

지구촌이 하나 되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인류의 공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나 홀로 핵을 가지고 좌충우돌로 겁을 주고, 평온한 지구촌에 불장난으로 망나니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이런 도발을 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못된 짓을 따끔하게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내부적 안보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증세를 통해 복지를 마련

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납부한 혈세를 소중하게 지출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가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 대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미국이 가세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 있는 상태지요.

이런 마당에 또 이렇게 북한이 불장난을 마침내 저지르고 있어서 참, 매우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선 앞에, 오전에 야당에서 김동철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못한 게 좀 있고, 또 뜻을 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됐다면, 2년간 걸쳐서 연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거기다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모범적으로 해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그런 점은 부각이 안 되고 약간, 아주 험한 말을 하고 내려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과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차디찬 감옥' 운운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없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감옥 운운한다는 게 평소에 민주주의를 많이 주장하고 참 법치주의를 주장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며, 또 이명박 대통령 보고 독재를 했다는 분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회에서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너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김동철 의원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존경하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곤혹스럽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민주주의라 하면 또 민주당에서 뒤지기 싫다는 분들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어떤 독재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저도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했는데 정말 이제 국민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말 참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늘 또 필요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감성을 자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우려할 때는 '지레짐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미국하고 중국에는 이렇게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감쪽같이 연막을 펴면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감입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답답하기는 참 답답합니다. 이제 이것을 대화로 풀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야당에서는 이것을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는데, 2006년도 1차 핵실험 할 때 대화가 없어서 핵실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따끔한 제재가 우선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3일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50여 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이번 달이 우리가 안보리 회의의 의장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들과 잘 협의를 해서 종전과는 다른 실효성 있고 강제성이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마련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기네들의 의도가 소탐대실이고, 결코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한성 의원 예, 정말 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단의 노력의 핵심에는 중국을 설득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렇게 동참해 줄 것이냐, 가시적인, 효과적인 제재를 해 줄 것이냐……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쥐고 있고 쌀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당장 거둔다면 북한은 당장에 항복할 텐데 참 그걸 그렇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정부로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다각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중국의 체제가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핵실험이 된 마당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과연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에 동참해 줄 것인지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중국과 협력을 다각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성 의원 중국이 이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도 마음 놓고 이렇게 북한만 편들 수 없는 입장인 것은 강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한성 의원 일본이 이제 핵무장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이렇게 주변 국가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에 넣어야 될 것이고, 중국도 어차피 세계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무역 실적이 떨어진다면 자기네 성장 속도도 멈출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조금 국제적으로 분위기를 맞춰서 중국을 설득하고 다소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중국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의원 예,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 지탱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정 누수 문제를 제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지가 한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와는 달리 자꾸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혈세야말로 참 소중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레미제라블에 보면 아주 사소한 물건을 훔쳐도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수조씩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 군데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민자사업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한성 의원 민자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정부에서 좀……

그 밑에 화면이, 책 밑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같은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하면 운영이 자연스럽게 될 것을 갖다가 어떻게 민간에서 하면 손해투성이고 맨날 손해만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좀 밝혀졌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민자사업은 1994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600건 정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전체 우리 SOC사업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초기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수요량의 예측기법이 좀 부실했고 관련 통계도 미비하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 중반에 와서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거쳐서 지금은 민자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초기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계은행에서는 지금 재정 여력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SOC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아주 모범 사례로 우리나라를 손꼽고 있고 올해 신설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투자협력기구가 우리나라에 본부를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예, 장관께서는 잔뜩 좀 좋은 면을 말씀하시고, 물론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MRG 때문에 2조 1000억 정도가 보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한성 의원 당초 계약상 이것을 다 사업 마칠 때까지 완성하자면 한 18조 80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사후관리를 좀 잘 한다면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자금을 재조달했을 때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문제라든지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당초 협약 당시보다는 MRG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김해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도 자원조달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처음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철도 실제 수요가 8% 정도에 그치고 있지요. 정말 참 엉터리 같은 수요가 돼 가지고 아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운영상의 문제인데 대개 그게 민간기업이나…… 맡겼을 때 감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28%에서 20%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8% 법인세를 적용해 주면서 손실이 많이 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또 보전해 주고, 또 임원을 턱도 없이 많이 고용해 가지고 그 임원들 월급 주느라고 다 손해 났다고 해 가지고 그것 또 보전해 주고, 뭐 등등 그냥 백양백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그냥 눈감고 다 대주고 중앙정부한테는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따끔한 제재가 좀 있어야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과다 추정했다든지 법인세율 인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적기에 조정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 등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이미 사용료를 인하하였거나 사용료를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안이 민법상의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뒤따라서 다시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재계약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적의(適宜) 조치를 한 점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기왕에 계약 체결한 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국민 부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합리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한성 의원 장관님 말씀대로 계약은 존중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임금을 부풀린다든지 또 세율이 낮아졌는데도 계속 세율을 그대로 높은 양 해 가지고 장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봐서 사위(詐僞)에 의한 그런 보전금 청구 그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시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올바른 지적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을 바로, 대처가…… 바로잡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일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잘못의 정도에 상응하는 사용료 인하폭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한성 의원 감사원에서 지적됐을 때는 원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초과수익 발생 시에 적용하는 운영비용 이런 것이라든지 또 비용이 미발생 했을 때 그것을 또 원가에 뺀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원에서 그런 권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PIMAC을 통해서 원가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원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원가를 추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작년 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각 해당 부처와 자치단체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BTL 사업도 좀 문제지만 유가보조금,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한성 의원 그것은 LPG나 경유 쓰면서 운행해서 벌어먹고 사시는 서민들 생계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격 없는 사람들도 주고, 차도 없는 사람들도 주고 또 물건을 경유나 LPG 쓰는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휘발유 쓰는 사람한테 주고 또 타이어 사는 사람들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방만하게 쓰여져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그게 연간 2조 원 되는데 표본조사를 하면 한 반 정도가 지금 사실 불분명하다, 소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적어도 1조 가까이가 지금 허투루 쓰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를 감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으로 확정이 된 것은 147억 원으로 제가……

○이한성 의원 현장조사한 게 그렇고 샘플조사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한 결과 한 51%의 주유 유종이나 단가정보가 누락이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 확인 체계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작년 1월 달에 했고요. 또 유종, 주유량 정보 등 확인 체계 구축도 재작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 밖에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일부 사례 등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많이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성 의원 장관님, 저도 그런 것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유가보조금을 진짜 한 푼도 새지 않게 철저하게 잘, 완벽하게 만들었다 보도자료도 봤는데 그래서 2조 원가량 되는 종전의, 그게 한 2010년경에 2조 원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불명하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됐으면 유가보조금 규모가 줄어야 될 텐데 2012년도 유가보조금 규모는 2조 5000억으로 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정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 참 끝이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유가보조금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인심 쓰다가 그나마 또 남은 돈은 용돈으로 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보다 현장에 대해서 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집행은 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소상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듣기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지급분 모두가 부정수급으로 보는 데에는 또 좀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한성 의원 국토해양부가 자랑삼아 얘기했으니까 제가 몇 건 찾아서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나 저희가 어떻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누수가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면세유 이것도 참 골치가 아프지요. 면세유는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해상 면세유라고 해 가지고 원양어선, 그다음에 연근해어업용 면세유, 그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크게 나갑니다.

그런데 해상 면세유 이것이 현재 검찰에서 적발된 것을 보면 연간 한 90억ℓ 정도가 면세유로 나가는데 한 4%가 샌다, 그것도 일망타진했다고 하지만 한 지역에서 한 업체 정도가 한번 걸렸습

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다 적발되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면 90억ℓ의 4%면 약 4억ℓ 그것을 계산하면 한 사오천억 이게 지하경제로 돌아다닌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대책이 좀 서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해상 면세유는 면세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는 대로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 제도개선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일부 제도는 작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해상 면세유와는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마는, 또 이른바 가짜 휘발유 등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부정 유류의 유통이 줄고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가짜 휘발유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가짜 휘발유도 현재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원료 그것이 용제 아닙니까, 용제? 세금이 없는 용제 싸게 사서 다른 것을 섞어 가지고 가까 휘발유를 만드는데, 용제 소모량이 연간 한 3억ℓ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ℓ면 약 15억ℓ 정도의 가짜 석유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약 한 3조 정도, 금액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게 지하경제로…… 그 대책을 하여튼 이번에도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적장치 같은 것이 완성된다니까 세원으로 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들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말씀하신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 등의 용제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이 작년에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리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대체로 추정키로는 한 1조 6000억 원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기왕에 3조 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크게 줄지 않았을까, 누구도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용제 생산 유통량에 비추어 보면 규모가 줄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용제를 단속하니까 용제를 좀 덜 섞고 다른 것을 많이 써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단속이 심하지 않을 때는 한 50%까지 정도로 정직하게—정직한 것도 아니지요—좀 그렇게 순진하게 하다가 지금은 한 20%만 섞고 나머지 80%를 다른 것을 섞기 때문에 지금은 5배 가량의 가짜 석유가 생산된다 이런 추정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답변 안 드려도 되지 싶은데요.

그것 역시 가짜 휘발유의 뭐 품질이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향상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고 결국 가짜 성분의 사용량 자체는 줄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SOC 투자도 이중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무슨 단선으로 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설계비를 잔뜩 들인 상태에서 복선 철도로 철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서니까 당초의 그런 설계비 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또 새로 한다든지, 지금 여주에서 충주 거쳐서 문경 오는 철도 이것을 단선으로 한다는데 지금 경북에 지나가는 철도 보면 한 6량 정도 달고 가는데 하나에 한 사람 정도 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주에서 문경 온들 그게 건설하자마자 1량에 한 사람씩 앉아 가지고 이용비율이 1.2%나 될까 말까 한…… 1.3%, 72명 좌석에. 이런 철도를 놓아서야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무리 녹색교통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놓으려면 제대로 놓고 또 대도시 거점을 통과하도록 해야 되지 산간벽지로 놓아서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철도 노선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특정 노선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지나친 일반화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정확한 수요추정 그리고 단선, 복선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끝으로 농기계 농업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좀 문제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5000만 원짜리 같으면 개인적으로 사면 3000만 원에 할인해 주는데 보조금이 붙으면 5000만 원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농민에게는 한 5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이래서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

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으니까 놔두고.

이게 학비보조금, 반값등록금 이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대학생 모아 놓고 '돈 주시오' 하면 그냥 대학교에서 책정한 대로 1인당 500만 원 책정했으면 200만 원 눈 감고 떼 줘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농기계의 경우도 농협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약 10~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중고 농기계를 대리점에 갖다 주고 그것을 교환해서 신제품을 이렇게 사시는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가운데 협상력이 좀 낮아져서 대리점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농기계보조금 일부의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제가 농식품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만들어서 농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도 한쪽에 이득을 주게 되면 그 이득의 일부는 다른 쪽으로 귀착되는 이런 현상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학부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이상 질문한 내용을 해당 장관님들한테 좀 잘 숙지시켜 주십시오. 시간상 장관님들 다 질문하지 못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다른 장관님들과 또 다음 후임자로 오실 부총리께 의원님의 걱정과 건의사항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온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경쟁의 열기를 뒤로 한 채 우리는 함께 시대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7년에 24.8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1만 5000명이 넘는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4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이 자살방지신고센터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저는 더 깊은 뿌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윌킨슨은 '평등이 답이다'라고 하는 저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기대수명이 짧고, 정신질환 비율, 수감률·비만·살인율 증가 등 사회 문제가 만연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노동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권 교체를 염원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희 민주통합당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그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절망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치하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고맙습니다.

○홍종학 의원 이제 임기가 열흘 남으셨기 때문에 평가하고 마무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이 이명박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밝혀서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그게 곧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홍종학 의원 그런데 야당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

셨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 보자 그러는데, 말하자면 주관에 따른 평가는 얼마든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확한 팩트하고 조금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학 의원 대정부질문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얼마나 반박을 잘하나 하는 초등학교 발표회장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면 대정부질문이 정부하고 여야가 이견을 조정해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종학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의원의 지적은 주관적이고 총리께서는 항상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항상 편파적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라든지 팩트를 제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보다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홍종학 의원 통계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통계도 있을 수 있고 나쁜 통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통계를 이용하는 분이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느 쪽의 통계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어느 쪽이 더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부 감사원 감사가, '정부가 다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 검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런 부분이 오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홍종학 의원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정부 부서가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검증하겠다', 앞으로 전 부서가 이럴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사원법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구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권고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4대강 감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또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려 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발표해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삼자로 하여금 검증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테고 상당 부분 보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보강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학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총합적인 절차이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하면서 따지겠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홍종학 의원 재심의 신청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는데, 다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오해되고 있거나 또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도 감사 결과가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하고는 부분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다른 정부 부서가 대승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재검증하겠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

라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홍종학 의원 총리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어느 때 재검증을 하고 어떤 때 재검증을 안 할지. 만드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같은 공적기관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알려질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4대강 문제는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론이 치열하게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는 문제이고 결국은 일부 환경학자들이나 야당에서는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고 그야말로 아주 부실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원 결과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관한 문제이지 제가 모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명하거나 석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해서는 안 되고 총리실은 가능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사건이 현재 사회에 어떠한 임팩트를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은 그러면 피감 부서가 하는 것이네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심의할 것은 재심의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그 해당 부서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더 정확히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 말하자면 용역을 주어서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일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아무 조치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홍종학 의원 양건 감사원장께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은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건 감사원장께서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증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이해하셨다면 양건 감사원장의 그와 같은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차후에 정부의 뜻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재검증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대승적으로 수용을 하되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4대강을 관리해야 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 보기 위한 재검증, 말하자면 연구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신 것으로 압니다.

○홍종학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총리실은 저렇게 재검증해도 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정부질문이 말싸움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럼요.

○홍종학 의원 작년 정기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총리님께 특별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합정동의 홈플러스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는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봤던 문제이고, 또 그 뒤에 총리로 와서도 국정에 있어서 갈등 과제로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 등 관계 당국과 주민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밀양의 여러 면 중에서 일부 면에 대해서는 주민과 사이에 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밀양의 송전탑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더 보완하는 그러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제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총리 공관 위에 76만 5000V의 송전선이 지나갔을 때를 한번 상정해 보면서 총리께서 노력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심정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법적 개선을 위해서 총리실에서요?

○국무총리 김황식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한전·지경부에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제도적인 문제로서는 우선 보상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송·변전선 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매년 감정가액을 실시를 한다든지 지가 하락에 따른 차액보상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작년 12월에 정부 발의되어 가지고 여하튼 검토 중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국회가 서로 논의를 해서 보다 수용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의원 망원월드컵시장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건 그동안에 4차 조정회의라든지 또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고려할, 여러 가지가 요구가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정청래 의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지경부장관하고도 그 문제를 상의를 했고요, 제가 일할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그러나 또 중기청장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촉구를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학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총리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다면 시장 상인들께서 훨씬 더 즐거운 설을 지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주관적인 질문 없었습니까?

(웃음소리)

○국무총리 김황식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홍종학 의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어려울 때 경제부총리로 취임하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부총리는 아니고 장관입니다만,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 저는 끝나가는 마당에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국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임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까 실질임금에 대한 자료는 상용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실질임금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2011년에 4.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경제성장률이 거의 3.6%인가 이렇게 됐는데 실질임금이 저렇게 감소한 이유는,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물가가 4%로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면 명목임금도 0.7% 하락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상용근로자입니다—그렇게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이 특히 부진했었고요, 참고로 2012년의 경우는 아직 11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7.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7.4%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5인 이상……

○홍종학 의원 제가 듣기로는 11월 달까지 2% 밖에 증가 안 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7.4%로 나와 있어서……

○홍종학 의원 그건 아직 발표 안 된 통계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11월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12월 통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홍종학 의원 아니, 11월까지는 2.5%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4%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누적 기준이니까……

○홍종학 의원 아, 누적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앞에서부터 죽 해 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 제일 큰 요인은 물가가 작년에 2.2%로 낮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공통된 현상입니다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된 그레이트 리세션(great recession), 이른바 대불황기 동안에 임금 인상이 절제되거나 또는 심지어 삭감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종전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불황기인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공급 측면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높아서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통계를 제가 갖고 온 것하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갑갑한데요.

하여튼 5인 이상 자료를 보면 2011년까지 4년 전부, 이명박 정부 4년 전부 해 －2.3%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2012년 11월까지로 계산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0.9%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 －2.3%라는 통계를 2011년까지 잡으신 건데, 가장 최근 통계까지 하면 －0.9인데 12월, 1월, 2월도 물가가 괜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 실질임금이……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실질임금이 0.9%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은 아닙니다마는.

○홍종학 의원 5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는 게 하나도 없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5인 이상 상용직의 경우.

○홍종학 의원 그러면 그 밑의 비정규직은 실질임금이 늘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해마다 임금인상률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인상률이 높고 실제 급여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우리가 중간 표본을 잡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통계가 2002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야 시계열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4년간—아직 금년 통계 안 나왔으니까, 작년 통계 안 나왔으니까요—경제성장률을 다 더하면 13.1%인데 실질임금은 －2.3%이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주요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독일…… 물론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그룹에서 한 세 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호주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제자리걸음 또는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아예 이 논의를 할 계제 자체가 안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불황기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자본금을 유보하면서 인건비는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 하나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아주 취약성이 함께 병존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업 부문의 부채가 줄고 내부유보가 늘고, 가계의 부채가 늘고 저축이 주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의 경우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기업 부채 때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구조 개혁을 한 결과 기업들의 부채가 줄

고 저축이 늘고, 그 반면에 가계의 부채가 늘고 저축이 주는 현상이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경제가 성장해도 노동자들은 －2.3%, 0.9%…… 경제가 성장해도 우리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난…… GDP가 늘어났다 하는 것도 사실은 경상이지 않습니까? 경상가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홍종학 의원 아니요. GDP 13.1%는 실질……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13.1%는 실질입니까?

○홍종학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면 실질인데……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실질이 13.1%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었다, 이런 적은 과거에 없었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실질임금은 늘었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홍종학 의원 1년만 줄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 5인 이상 통계는 2002년부터 나왔거든요.

○홍종학 의원 예, 10인 이상 통계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5인 이상을 다른 것하고 좀 혼동을 하시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벤치마크로 잡고 드리는 통계는 2002년부터 나왔고 외환위기 때도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홍종학 의원 왜 이렇게 한 해만 감소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감소하지 않을 수가 없어……

○홍종학 의원 아니, 한 해만 감소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김대중 정부 5년간 감소했냐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때는 통계가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10인 이상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만 2000년 이후에 유일하게 5년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게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실질 GDP 자체가 줄어든 나라가 태반인데……

○홍종학 의원 아니,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경제성장을 많이 하셨다고 정부는 자랑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자랑하지 않습니다.

○홍종학 의원 하여튼 경제위기를 극복하셨다고 하시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었다, 그게 현실이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어제 국제기구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 그분께 허락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하는 의원 있음)

○홍종학 의원 다음 그림을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인데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뭘 선방했는지 제가 지금,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게 경제위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기업의 소득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비난하셨던 참여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과 기업소득과 그다음에 임금이 아주 동일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경제위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겁니까, 우리 경제부서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가 속했던 이른바 대안정기 또는 불황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Great Moderation) 시대 때의 기업의 행태와 대위축기·대불황기 시대

때의 기업의 행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것은 좀 어렵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홍종학 의원 제가 지금 참여정부랑 비교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은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이 있느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불황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정부가 최대한 자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 사람을 많이 뽑아 달라 그런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학 의원 저희가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노동자들한테 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는데,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비해서 잘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OECD 전망치가 3.4%인데 우리나라는 3.1%로 전망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3.0%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올해……

○홍종학 의원 예,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해가 지났으니까.

장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세계 경제에 비해서 한국 경제가 이명박 정부 기간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금년에는 이렇게 나쁩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2004년 정도까지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우리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소득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득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으로 하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성장률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체로 중국이라든지 인도 등 신흥국가의 성장률이기 때문이지요. 선진국일수록 1~2%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속으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큰 흐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역시 세계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률하고 함께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저도 꼭 이번 정부, 지난 정부를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하는 게 좀 치사하고 졸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우리가 통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까지의 대안정기·호황기 때보다는 우리 정부의 성장률이 0.5%p,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5%p 낮았습니다, 대호황기 때.

그런데 2008년 이후 대불황기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2.9%로 지난 5년간 동일합니다.

그것은 절대성장률 수치로 보면 5년 전보다 못하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에 0.5%p 뒤지다가 이제 격차를 메꿔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0.4%나 낮게 전망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금년도 실질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실질임금은 저희들이 전망치를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물가가 대체로 2% 중·후반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은 우리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지난해 성장률이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나온 기저효과로 인해서 베이스 다운 이펙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4년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에 큰 외생변수가 없다면.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금년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작년보다는 낫겠

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이렇게 좋아지기보다는 완만하고 지루하게 상승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홍종학 의원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설 때는 경제 체질을 바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선 고속성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두 차례의 세계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공격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수비를 튼튼히 하는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경착륙을 한다거나 시스템 위기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다른 나라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라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공격은 일관되게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테일 리스트(tail risk) 꼬리 위험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와 함께 공격도 병행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에 실질임금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임금을 전망치 또는 목표치로 내게 되면 노사 교섭에 가이드라인처럼 비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실질임금의 전망치는 가급적 제시하지 않습니다.

○홍종학 의원 엔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다른 나라의 특정 통화와 관련해서 대책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그게 대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대책을 엔저 영향이, 엔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하는 이런 아주 원론적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지금 시중에는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엔저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대기업 쪽에서는 엔저 때문에 한국 경제가 큰 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과거 네 차례의 엔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모습을 갖춘 이후 그 네 차례의 엔저, 원화 강세, 달러화 약세의 시대에 두 차례는 한국 경제가 아주 순풍처럼 잘 나갔었고요. 두 차례는 역풍을 받은 것처럼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토빈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반대하시는 발언을 작년에 하셨는데요. 최근에 고위 관료께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우리 차관보가 세미나에서 토빈세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여러 여건, 중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에 비추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또는 외환거래세 도입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보도가 되기는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합의하여 함께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는 박근혜 당선자도 그러시고요, 재벌·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부터 우선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가급적이면 현행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원을 더욱 포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탈루되어 있는 세원들을 조세체계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일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감면을 줄여 나감으로써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재벌의 R&D 감면을 줄이자고 법안을 냈는데요, 기재부에서도 반대하셨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박근혜 당선자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기재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세소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상당히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재량지출 7% 일괄 삭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퍼센트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한 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 가운데 일부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종학 의원 2010년도에 기재부에서 이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실제로 줄어든 수치는 5년 동안 1~2%밖에 안 됐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존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특단의 방식이라 할까요, 근원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공약 이런 것을 떠나서 세원을 늘리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해외의 사례 등도 샅샅이 훑고 해서 창의적인 제3의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만든 뒤에도 국민들과 함께 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앞장서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종학 의원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장관님 개인적인 제안은 어떠신 것입니까? 지금 복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약한 대로 복지 지출을 지키면서 아니면 이런 재원 마련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어떤 것을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우리 복지 지출 수준이 GDP 대비……

○홍종학 의원 아니,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이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가져가기 위해 늘려 가야 한다는 큰 방향과 그 늘려 나가는 속도는 우리의 담세력 즉 국민소득 수준과 복지 수요, 즉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성장·복지·일자리가 함께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 곧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보다는 더 국가가 잘 해 주는 노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홍종학 의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참고로,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노르딕 4개 국가의 복지제도에 관한 특집 기사를 의원님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종학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홍종학 의원 다 빠졌습니까, 거품?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정부가 그 두 가지 정도 변수에 대해서는, 가격변수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조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이고요, 둘째는 집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집값 수준이 적정하다든지, 지금 더 내려갈 것 같다든지, 올라갈 것 같다든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홍종학 의원 그런데 작년 9월 10일에 그 발언을 하셔 가지고 집값 하락에 그런 기여를 하셨네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발언은 전문가들

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컨센서스'라는 것이고 일간지 등에서도 흔히 우리가 칼럼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종학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또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월급을 다 모아서 물만 먹고 산다면 13년이 걸려야 집을 몇 평짜리를 살 수 있다 하는 등의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 전개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우리의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어쩌면 더 싸다 하는 또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저는 새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경제민주화정책, 복지정책들을 모두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박병석 오늘 국방부장관은 출석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노근 의원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한 우리나라 안보환경의 급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국가 중에 대부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지금 핵을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인 반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걷고 있고, 여기다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여러 가지 정책이, 안보 관련정책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일부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NPT의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해서, 당장 핵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노근 의원 물론 지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께서는 그런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이런 안보의 큰 위기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평상시의 안전한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무위원들, 특히 며칠 전에 핵실험 발표 이후에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안보 관련 장관들이 모였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노근 의원 그런데 그게 TV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참으로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양복 딱딱 빼고, 구두 딱딱 신고, 넥타이 다 쫙쫙 하고, 평온하게 아무 긴장감도 없이, '청와대 벙커에서 저게 뭐냐, 저게'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벌써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아시다시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 여러 번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방위복입니다. 군복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양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있어서 다른데, 지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야외에서의 활동 옷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복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세종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연락을 받고 바로바로 해서 하여튼 1시간 좀 넘게 걸쳐서 도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민방위복은 준비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갔지만, 그러나 어쨌든 늦은 입장에서는 빨리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지, '복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나' 이것을 의식하면서 복장을 민방위복을 입어야 되나 양복을 입어야 되나 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근 의원 물론 그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TV라는 것은 세계 각국에 다 비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긴장감 내색도 없이 또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상황을 의식해서라도, 일종의 심리전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회고를 해 보면 한 20년 남짓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대화를 한다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고 또 남북 간에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제가 통일부 자료 보니까 한 3조 2000억입니까? 그 정도, 4개의 정권이 움직이는 가운데 한 3조 2000억은 공식적인 돈이고요. 그 정도 북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그동안 북에서는 뭐로 활용했느냐, 바로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자기들의 기한의 이익을, 다 했고 또 우리가 준 3조 2000억 또 비공식적으로 간 돈이 수조 원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돈이 직접 투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북한도 여전히 예산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예산을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고 그랬다면,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선의로 했지만 결국 저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악의로 다 활용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시대에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선의의 노력이 있었고 그러한 시도는 정말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진 선의의 포용정책도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말하자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원래 세력이라는 것은 뭐 정치학에서 다 배웠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균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비급은 헤비급대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라이트급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국제도 역시 냉혹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쪽에 핵무기, 이쪽에는 그냥 재래식무기, 비대칭으로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달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안 되겠다 우리가 반성을 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주권을 찾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에 시민사회

나 또 언론이나 뜻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나 국민들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포기할 때 생기는 더 다양한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함부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종전과 좀 다른, 더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문제들은 다음 정권에서 좀 더 다양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쨌든 이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노근 의원 원래 제가 알기는 비핵화의 근거는 물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남북한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거기에 하나에 근거를 두고 또 NPT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다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물론 NPT는 뭐 그대로 존속하지만.

그러나 북한은 이미 다 탈퇴했지 않습니까? 또 핵을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파트너로서 존재했던 그 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핵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한다 하면 적어도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준다고 그래서 91년입니까, 92년입니까?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노근 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핵 보유를 하는 것과 또 유사한 그런 문제점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하에서 말하자면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여하튼 계속해서 확보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그 밖에 전술핵 배치 문제라든지 핵 보유 문제와 같은 것들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혹시 논의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여하튼 일반 민간단체나 학술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저는 핵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도 당장 미국의 핵우산에 관한 보장도 그렇게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장관이나 또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때 서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성명서로 대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핵에 대한 우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구속력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핵을 배치를 한다, 또는 투입을 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최소한의, 선언 수준이 아니라 협정 수준이라도—정부 간의 협정 수준—더 나아가서는 조약 수준에까지 이제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미동맹관계는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잘 지켜 온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을 의심한다든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더 확실히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의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53년도 체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이후에 단 하나도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약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보강하든지 또 지금까지 단순히 선언서 이런 것만 하는데 한미행정협정처럼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협정체제로 가서 양쪽의 책임자들이 다 사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최근에 국방부장관께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총리께서 이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징후가 포착이 되고 그것을 판정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선제공격을 한다, 그러면 판정권과 공격의 결정권, 징후의 판정권과 공격의 결정권이 있

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뭐 선제타격 문제는 우리에 명백하고 실제적인 위협이 닥쳤을 때 문제이고,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의원 여하튼 국가 안위에 관해서는 잘 상황 변화에 맞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총리 들어가십시오.

(박병석 부의장, 강창희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4대강 관련해서……

국토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일부에서, 시민단체 모 교수께서 무슨 함안보입니까? 그 보에 파이핑 현상이 생겨서 이것이 조만간 무너질 우려도 있다, 이렇게 온통 TV고 언론에 그냥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이 작년 9월 초일 것입니다, 장마 시에. 그것이 맞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9월 중순에 그런 발언이 있었고,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렇다면 그대로 됐다면 무너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 밑으로 모래가 파고 들어가 물이 밖에서 펑펑 솟으니 전문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 이렇게 되면 며칠 안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파이핑 현상이 있었다면 보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보에 물을 가두는 그 기능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것이 그러면 뭐로 밝혀졌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사실이 아닙니다. 9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위가 올라가면서 고정보 끝단에 콘크리트로 된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 위에서 물이…… 와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물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파이핑 현상이 있었다는 그 위치 바로 밑에는, 직하방에는 고정보 콘크리트 구조가 있기 때문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노근 의원 바로 이렇게 오도되는 이상한 여론 때문에 정부가 불신당하고 국민이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에 감사원의 지난번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자료를 아주 자극적이고 너무나 문장 구조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 입증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 '보가 위험하다' 이랬습니다.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요. 보(洑)면 이렇게 보 몸체를 생각을 하잖습니까? 그 몸체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대처를 못 합니까?

어디입니까, 문제가 되는 곳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바닥보호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자동차로 말하면 범퍼 같은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것이 큰 홍수가 오거나 해서 손상을 입으면 보강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물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 날 제가 환경부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노근 의원 이게 보 몸체가 있고 그다음에 물받이공이 있고 바닥보호공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40m가 됩니다. 그 두께가 3m, 폭이 40m 그리고 그다음에 한 팔십 여 m의 바닥보호공이 있는데 바닥보호공 끄트머리에 일부 유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으니, 감사원장이 국가를 혼란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도 공직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을 차제에…… 이번에 만약 헌법 개정한다면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회계감사하는 심계원으로 해서 다시 옛날처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여기에 크랙이 3783m 났다고 그러는데 이것 깜짝 놀라지요. 이것 감사원 발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중에서 허용오차가 99%이고 범위 내 속하는 것이 16.2m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 이미, 크랙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발생

하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미 다 에폭시 처리를 통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16.2m만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노근 의원 그러니 감사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감사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여수 엑스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여수 엑스포, 엑스포 그 자체는 한 2조 정도 들었고요.

○이노근 의원 아니, 같이 부대시설, SOC……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접근 교통시설이 원래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엑스포 개최시기에 좀 맞추어서 앞당겨서 건설을 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래서 공식발표가 12조 1000억입니다. 4대강은 환경기초시설 4조를 빼면 18조입니다. 거기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여기는 한 지역에 12조 1000억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감사원이 잘 발표하고 이것을 조율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측면으로 바뀌어야지, 무슨 감사원이 시민단체입니까? 폭로성으로 발표를 하게.

그래서 이것을 빨대예산이라고 그럽니다, 빨대예산.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평창올림픽은 어떻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다음에는 기재부장관님!

아까 여수 엑스포 B/C가 얼마 나와 있는지 압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노근 의원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당초 0.519였습니다마는 다른 요소까지 다 감안한 AHP가 0.811로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마 우리나라 대규모 사업 B/C분석을 해서 AHP분석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노근 의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노근 의원 바로 이게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내가 여수엑스포를 문제 삼으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 4대강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합시다.

경부고속도로 만든 것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잖아요.

KTX 반대했잖아요! 인천공항 다 반대했잖아요! 찬성한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국정을 논의해야지, 부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면 국력의 소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노근 의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개인적으로 아주 중환자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라면 응급실에 실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는 회복 가능성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의원 대책이 뭡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기울였습니다마는 또 그중에 일부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노근 의원 그것은 데스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필드에 나가 보십시오.

정부에 원망 쌓인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이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역에 따라서 좀 온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정부고 국회도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었던 불합리한 규제는 좀 완화를 해 주시고 또 중과세제도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잘 말씀하셨어.

아까 대호황기라고 그랬어요, 또 대불황기.

그렇다면 지금 대불황기잖아요. 대호황기 때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 장치는 다 벗어내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저희는 그렇게……

○이노근 의원 그러면 환자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노근 의원 그러면 취득세 지나갔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기하면 정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노근 의원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LTV하고 DTI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 점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현행 규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노근 의원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KDI나 이런 아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환자가 다 죽어 가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 좀 완충이 가능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감대는 금융 관련 규제는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쪽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환자는 다 죽어 가는데 언제 그럽니까?

여하튼 잘 고려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노근 의원 다음에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북부법원·검찰청 자리가 지금 2년 6개월째 이사를 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자리에 지금 방치된 까닭이 2013년도 예산에 검찰청 특수기록관 설치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강서·구로·은평 이런 쪽에 여러 대체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다시 최근 2월에 세곡과 문정지구를 저희들이 죽 둘러보고 있습니다.

둘러봐서 그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감정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도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특수기록관이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장관님 때 일어난 일이니까 장관님 계실 때 그냥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획재정부 또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이노근 의원 이건 KTX 강남북 차별정책에 관한 질문인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기재부장관님과 국토부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설하면서 조금 톤을 높였습니다마는 문제는 국회의원의 품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정책을 가지고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렇게 시비를 가려야지 누구를 폭로하고 사실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 확대·왜곡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바로 언론을 타서 어디로 가는가…… 국민한테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 피해입니까? 국가, 정부, 특히 외국……

아니, 4대강만 해도 그래요. 지금 태국에 큰 공사 발주하려고 직전에 있는데 감사원에서 무책임하게, 그리고 또 언론에서 총체적 부실이다, 안전성이 없어서 무너질 것 같다, 이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품위를 지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

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과 같이 존중하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지역과 세대, 계층을 모두 통합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노동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하에서 비정규직 차별의 설움과 노동인권 유린에 의한 눈물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는데 앞으로 새 정부 5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절망적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분들의 설움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 우리의 노동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공언했던 법과 원칙은 무너지고 노사관계의 선진화, 상생의 노사관계는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폭력적인 노조 파괴와 불법적인 근로자 인권 유린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50만 명, 전체 노동자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파탄 났고 산업현장은 타임오프다, 복수노조다 하여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까지 더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54만 명의 근로자가 정리해고 등으로 기업을 떠났습니다.

기업이 대량해고를 할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는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단 한 기업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정부는 단 한 기업도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습니다.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때 신세계 이마트와 같은 재벌기업은 자기 회사 직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찰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근로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일부 기업주들은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근로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노조를 파괴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창조컨설팅, 컨택터스와 같은 권력과 연계된 노조파괴 전문기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는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회계 조작과 HPV라고 하는 생산성지수 조작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서 2600여 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쫓겨났고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선 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만에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당선인은 모른 체 방조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하루아침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 불가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나서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명백히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치권이 나서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정치인이 나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정치권 전체의 무능함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쌍용자동차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 활동을 통해서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사의 회장으로부터 9000억 원 투자 약속을 이끌어 낸 것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노사가 목숨을 내던지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보고만 있으라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하며 매년 발생하는 수만 명의 정리해고자 문제를 수수방관하겠다고 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일 뿐입니다.

3년 동안 노사 자율에 맡겨졌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쌍용자동차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간다면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는 불가능

합니다. 상하이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기술 유출과 제2의 먹튀 사태로 쌍용차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사는 1995년 미국 포드사와 3년간의 합작, 그리고 2005년 르노자동차와 4년간의 합작을 통해서 자동차 차체 제조기술을 습득했고 마지막 남은 자동차 핵심기술인 엔진과 변속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마힌드라사가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9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계획의 대부분은 노후화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힌드라사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더구나 9000억 원의 투자개발비는 인도 마힌드라사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과 쌍용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과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해외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담보로 한 9000억 원을 엔진 개발에 투자해서 그 혜택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경영 정상화인지, 아니면 제2의 먹튀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직이 예정된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455명 외에 나머지 2000여 명의 해고자와 퇴직자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서라도, 쌍용자동차의 제대로 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와 해직자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18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고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이 137명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다가 해직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기본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서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과 2006년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시 행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요구와 활동이 부당한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되고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이들 해직 공무원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합법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겨우 1일 내지 3일간 결근을 했다는 사유로 해직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렴치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닙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순수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해직이 길게는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으면 정년퇴직 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징계가 유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말 이명박 정부는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들을 사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이 해직 공무원들이 먼저 사면·복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은 합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파업에 또 시위에 나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법원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경우는 다 선의로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 징계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각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총파업이나 시위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말하자면 중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

통령의 사면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협 의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임기가 대통령께서 다 끝나셨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보다 공론화하고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공무원노조는 2007년에 합법적으로 신고증을 교부받아서 활동하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의 합법적인 노조가 통합해서 동일한 규약과 동일한 조합원으로 동일한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2009년, 2010년, 2012년 각각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회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였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된다, 그것은 뭐 당연한 지적입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설립신고 요건에 합당하게 그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할 때는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조합원으로 해서 신고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소송이 되어가지고 법원에서도 하급심에서 현재 설립신고 반려가 적법하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고 그것이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설립신고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서 합헌적인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필요하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무원노조하고 관련된 분들도 설립 요건을 갖추어서 정부가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또 그래서 함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서로 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그러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만 해결되면 설립신고필증은 가능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반려 이유 중에서 큰 부분이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가 치유가 되면, 다른 특별한 요건이, 또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하튼 법대로 요건이 심사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를 국정의 동반자라 인식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서 공직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정비사업 구역이 2110곳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전체의 25% 436개에 불과하고, 75%에 해당하는 1700곳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조합 설립 후 착공되지 않은 292곳의 매몰비용만 추산해 봐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와 국민이 다 부담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들에게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서 지연·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민간에게 부담시킨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또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이와 같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로서 전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 사적 관계에 국고가 한없이 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고 지원의 확대라든지 부분적인 노력을 경주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합 측하고도 같이 이렇게 서로 좋은,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한꺼번에 국고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잠깐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02년 당선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해 말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뉴타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면서 10년만 지나면 주거환경이 달라진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1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뉴타운 정책을 뒷받침한 내용입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를 통해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총리님, 뉴타운 정책 실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무튼 이와 같은 사정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제가 조합 단계에 대해서 매몰비용 국고 지원을 가능토록 해서 국비·지방비·주민 이렇게 해서 3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해 나가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국비 지원은 못 하겠다고 작년 정기국회 때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 이유는 민간 수익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여드린 자료는 2009년 9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성격 규정 요지는 정부가 주장하는 민간 수익사업단체 격이 아니라 행정주체 격이라는 것입니다.

총리님, 민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대법원 판례는 그것이 어떤 취지로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려진 취지인지 하는 것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대법원 판례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한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행정주체로서 성격을 인정한 것이고 재건축사업 전반을 사익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익에 관련된 사업인데 다만 그것들이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익사업으로 봐 가지고 국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판례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화면을 잠깐, 더 좀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조합은 행정주체 격이고 사업도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공익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민간수익사업이니 국가지원은 안 된다, 이것을 국가가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 그리고 주민이 공동 부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사익단체냐 공익단체냐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지원이 전폭적이든 부분적이든 논의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나 또 국회·정치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이 사익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국고지원으로 그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결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혼란이 생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담금을 유예한다든지 뭐 각종 규제를 푼다든지 또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더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의원 뉴타운 사업은 방금 전에 보신대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장밋빛 뉴타운 그림을 그리면서 불을 붙였고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로 뉴타운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즉각 뉴타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GTX 사업,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인데요. 국토부가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이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기재부가 주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GTX B노선을 현재 보면, 계획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송도-인천시청 그다음에 부천-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로 연결되는 49.9㎞ 광역급행철도 계획인데요, 사업비가 약 4조 6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이 동일한 구간의 경인선 지하화와 GTX B노선을 병합 추진할 경우에 약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GTX도 사업비 문제, 지하건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되고 경인전철 지하화는 안 된다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중앙을 가로지르는 파란색은 현재의 경인선 전철 노선이고 붉은색 점선은 계획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입니다. 지도상에 나타난 것처럼 송도에서 인천시청까지 일부 구간을 빼면 경인전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길을 지상과 지하에 2개의 철도로, 철로로 나뉘어서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9호선처럼 급행과 일반열차가 함께 가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먼저 경제성 측면에서 건설공사비를 약 3조 원을 줄일 수 있고 경인선 지상공간을 활용할 경우 그 공사비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9호선처럼 한 승강장 안에서 급행, 완행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서 승객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승객 유치에도 유리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GTX와 경인전철 지하화를 연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말한 경인선 지하화의 기술적인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 서면질의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렇게 해서 병합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비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대단히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 경인선이 일반 철도도 있고 전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하화하는 문제하고 새로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것하고 병행될 수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기존 선을 지하화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방안이고 또 같이 운행을 하려면 아마 노선이 굉장히 여러 선이 돼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협 의원 한번 제가 제안 드린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해당 지자체가 같이 한

번 협의하는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희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는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해서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재원 의원 그중에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 제조 금지,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과연 비핵화 공동선언이 그 효력을 다한 것인지, 앞으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하고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작년에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말았고 이제는 그 선언문이 휴지조각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폐기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의 그와 같은 태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공동선언은 말씀 그대로 남북한이 합리적인 협의를 거쳐서 선언을 한 것인데 일방이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폐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 효력을, 법률적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폐기되는 그러한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 쪽의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이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우리 남한, 우리 정부조차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다 이렇게 당장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 비핵화 공동선언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력화된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 돌아갈 수 있다고,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되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실효적인 그런 제재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른 관점에서 더 넓은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검토, 특히 새 정부에서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 물론 이 비핵화 공동선언이 양 당사자의 어떤 쌍무계약처럼 국제사회에서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약속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비핵화 공동선언 자체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신사협정이다, 일반적인 공동선언의 선언적 효과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가 폐기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재원 의원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할 때 당시에 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또 연형묵 총리가 서명을 했고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역시 정원식 총리가 서명을 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다시피 한 것은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사실상의 문제하고 그야말로 법률적인 문제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문제들은 현실과 말하자면 당위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사실상의 문제에 너무 착안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실상 폐기됐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조치를 합리적이고 우리 국익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 가면서 그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을 상당히 지켜볼 겁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 버렸고 비핵화선언을 폐기하면서 반복해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막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총리 말씀대로 무조건 기다리고 방관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서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핵화선언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비핵화선언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비핵화선언을 지킬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비핵화기본법을 만들고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키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공감합니다.

○김재원 의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비핵화기본법 정도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지금 당장 2015년 6월 15일이 되면 한미 원자력협정이 효력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재개정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 협상에서 실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자력 연료의 농축·재처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2015년까지 유지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핵연료 농축은 어렵다 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도는 받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조하에서 새 정부가 또 정치권과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까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그대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민간 부문에서 원자력이라든지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우리가 국익 관점에서 개발을 하고 수출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쳐 있는 폐기물 처리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재협상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군다나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가 생겼으니 그런 사정을 또 반영한 말하자면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그러한 논의가 한번……

○김재원 의원 아니, 이런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고 할 때 전술핵을 우리가 개발하자는 거는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아닙니다.

○김재원 의원 총리께서는 말씀을 조금……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부문에서 그 부분을 잘 해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문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원 의원 총리께서는 그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의원 좋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비핵화 공동선언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미국 핵우산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이 배치를 한다면 이것은 핵확산금지협약(NPT)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말입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억지력 확보를 위해서 자신들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은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글쎄요, 그와 같은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의 배치도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래서 남북 핵 협상,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의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만약에 사문화된다면, 무력화된다면 여전히 가능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글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핵 보유를 하는 경우하고 또 미군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하고 과연 얼마만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지, 같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술핵 배치도……

○김재원 의원 반대한다?

○국무총리 김황식 반대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더 나아가서 핵무기 소형화에까지 성공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는 반대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정부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러나 지금 새로운 이런 사정이 생겼으니까, 더군다나 이 정부는 사실상 이제 문을 닫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 따른 많은 선택지를 놓고 그리고 새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재원 의원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식품에서 발암물질 한두 개만 검출되어도 판매중지를 시키는데 독극물인 청산가스, 비소 등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는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재원 의원 많이 피우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재원 의원 하루 몇 갑 피우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한 갑반 내지 두 갑 정도……

○김재원 의원 두 갑이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재원 의원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십시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재 매년 3만 명입니다. 매일 82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5229명입니다.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1조 6000억에 달하면서 간접흡연 피해액, 조기사망 등의 피해액 전부 합치면 대체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10조 원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물을 마시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십니까?

담배 관련해서 세금수입이 연간 5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2010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담배가격이 250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우리…… 가장 낮

은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하위권에 있기는 한데 가장 낮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이게 WHO 발표인데요, US달러 기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77번째, 국민소득 대비 담뱃값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 중의 하나인데요.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호주담배는 한 갑에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 우리나라는 2달러 조금 넘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성 15세 이상 흡연율이 우리나라가 40.8% OECD 34개국 중에 1위입니다. 기재부장관도 34개국 중 1위에 들어가십니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웨덴인데 12.8%거든요. 미국은 16.7%, 담뱃값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19% 수준,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47.3%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담뱃값을 인상해 왔는데 조세저항에 따른 우려, 흡연자들의 반대 또 물가상승 이런 이유로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2005년 이후 8년간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흡연을 많이 한다 이런 이유지요. 그렇지만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담배를 많이 끊는다고 합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저소득층 흡연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흡연율이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담뱃값이 비싼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가 반서민정책을 취하는 나라는 아니다 이겁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0.85%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 중에서 담배 비중이 다른 품목보다 가중치가 4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뱃값을 올려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담배피우는 흡연율도 낮추고 또 필요하면 세수에도 영향을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재부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담배가격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2004년 12월에 올린 뒤에 8년이 좀 지난 상황이라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담금을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올릴 때가 되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재원 의원 담배 관련 지방세로 2011년에 보면 4조 2000억 원 징수했고 건강증진부담금으로 1조 6000억 원 징수했거든요. 만약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1조 3000억 원, 2500원 인상하면 3조 8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합니다. 현재의 제세부담금 비율대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건강증진기금을 1조 2362억 원 정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박근혜 당선자의 4대 중증 100%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연간 비용 1조 5000억 원 정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뱃값을 최소 커피전문점의 평균 커피값 수준인 45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이것을 금연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 재원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도 보호하고 건강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 쪽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좋겠고요, 세수 확보는 부수적인 효과로 수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문제는 흡연의 가격탄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가격을 10% 올렸을 때 소비가 한 3.6%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가격정책 외에 비가격정책,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흡연의 나쁜 점에 대해서 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규제를 지금 추세처럼 강화하는 등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40여 년 이렇게 흡연한 사람보다는 좀 더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과 젊은층 또 새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여성층 등에 대해서 흡연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원 의원 들어 보니까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담배 피웠으니까 2000원 올리더라도 계속 피우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사실 2004년도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가격 올릴 때 찬성을 하고 그 이후에 2006년, 2007년 담배가격 올리는 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할 때 아홉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올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담배가 여러 가지 갖는 폐해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재원 의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건설, GS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총 17개 건설사가 4대강 2차 공사 입찰과정에 담합한 사실 이것을 검찰에 조사 이첩했는데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를 밝혔습니다. 이 4대강 1차 턴키공사에서 담합 저지른 17개 건설사들이 2차 공사 입찰에도 16개 공사구간에서 다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일단은 드러났는데요.

제가 지난해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가 전부 담합입찰이니 검찰이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아직도 이 모양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사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 6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작년 6월에 4대강조사위원회에 의해서 8개 건설업체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었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1월에 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열 분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17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되고 그 외에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을 조사한 이후에 공정위 직원 자료 유출 사건이라든지 공정위 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합되어 있어서……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원 의원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까지 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특별히 수사를 고의로 지연 내지는 방치했다 이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 제가 서울지검 형사7부 출신인데 이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7부에 배당해서 수사하게 해 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검찰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적절한 부서를 찾아서 배당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러면 아직 수사 결과가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현재 수사 중이라 수사 내용에 대해서, 담합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경위로 담합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재원 의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2010년도에 신한금융지주 사건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과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조세조사3부에 고발했는데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입니다. 이것 내용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김재원 의원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이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비서실 송모 씨를 통해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고, 라 전 회장이 개입한 증거나 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못 밝혔다' 이렇게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결국 돈이 간 곳은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지난 8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라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뿐만 아니라 최시중, 천신일 이 두 분의 실세들과도 호형호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중의 누구한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조사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사건 수사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했는데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아서 아마 실체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수사가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현재까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원 의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남산 3억 원 사건, 그 이후에 50억 원이 개인 돈이다, 박연차 회장에게 준 돈이 얼마가 있다, 2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못 밝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의혹들이 제기된 것은 있

었습니다마는 수사 결과에 나타난 그런 부분만 밝혀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장관,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고 핵심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수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앞날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진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세연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형태	김희국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윤명희	윤영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군현
이노근	이명수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조경태	조명철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최동익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주홍
황진하			

(변재일·金永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5인, 찬성 의원 185인, 기권 의원 없음)

○출석 의원(28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유정복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94인)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진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영교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재권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유정복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직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장우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동익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78인)

강기윤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승남	김을동	김재윤	김종태
김춘진	김한표	김형태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박기춘
박대동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변재일	부좌현
성완종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장용	심상정
심재철	양승조	염동열	원유철
원혜영	유승우	유인태	윤관석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이운룡
이원욱	李宰榮	이종진	이찬열
이한성	임수경	전정희	정갑윤
정수성	정청래	정희수	조명철
진성준	최규성	최봉홍	최원식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홍종학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81인)

강기윤	강길부	강은희	강창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명연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재원	김종태
김춘진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형태	김희국	남인순	민병주
박대동	박덕흠	박병석	박성효
박지원	박혜자	배기운	부좌현
서용교	손인춘	신경림	안홍준
양승조	염동열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승우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호중	윤후덕	이노근
이만우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李宰榮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내현	정병국	정의화	조명철
주영순	최규성	한기호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지만			

○청가 의원(4인)

김태호	유일호	이석현	장하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정진석
입법차장	임병규
의사국장	전상수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황식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통일부장관	류우익
법무부장관	권재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특임장관	고흥길

○출석 정부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금융위원장	김석동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무총리 후보자(정홍원)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원유철 홍일표 이진복 김희정 신동우 이완영 이장우	새누리당	2013. 2. 13
	전병헌 민병두 이춘석 최민희 홍익표	민주통합당	
	이상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주영순·이강후·정희수·이만우·강은희·김태원·최봉홍·이종진·김상민·서용교·박대동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김재윤·배기운·김우남·홍익표·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김태년·김태원·남인순·장하나·정성호·유기홍·윤관석·홍종학·안민석·김성곤·전정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민홍철·박혜자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김재윤·배기운·김우남·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문병호·김태년·이인영·권은희·김태원·정성호·윤관석·홍종학·전순옥·김성곤·전정희·김미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박혜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

(2012. 2. 7 김동완·정희수·김춘진·정성호·이노근·김한표·염동열·이명수·홍문표·김관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김재윤·배기운·김우남·이낙연·이상직·김태원·정성호·유기홍·윤관석·홍종학·김성곤·유대운·박남춘·이원욱·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노회찬·배기운·김현미·김영주·남인순·홍종학·김기식·김기준·이종걸·김제남·심상정·강동원·정진후·박원석·서기호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박영선·정성호·우원식·김현미·김동철·김기식·홍종학·전해철·박주선·노웅래·박남춘·신경민·남인순·문병호 의원 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박영선·정성호·우원식·김현미·김동철·김기식·홍종학·전해철·박주선·노웅래·박남춘·신경민·남인순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박대동·정희수·홍문표·하태경·김상훈·성완종·김을동·이재영·최봉홍·주영순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민병주·박인숙·박성호·심재철·강은희·윤명희·류지영·손인춘·안홍준·이현재·이에리사·이장우·박창식 의원 발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김춘진·배기운·김승남·황진하·김성곤·이상직·정성호·남인순·박원석·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설훈·박남춘·정세균·강기정·김태년·김현미·인재근·이원욱·홍종학·안규백·이언주·박홍근·홍의락·이만우·이석현·한명숙·이인영·조정식·유기홍·배기운·김성곤·김경협·우상호·김민기·김재윤·양승조·문병호·임수경·김미희·유은혜 의원 발의)

2월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서기호·정진후·최원식·심상정·김제남·노회찬·강동원·박원석·오영식·유성엽·남인순 의원 발의)
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김재윤·배기운·김우남·남인순·정성호·윤관석·홍종학·신장용·박남춘·장하나 의원 발의)
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윤명희·정희수·홍문표·김우남·이자스민·민병주·이채익·강은희·이상일·김영록·김을동·고희선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조명철·정문헌·한기호·주호영·김정록·노철래·김세연·정갑윤·김성곤·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윤명희·정희수·홍문표·김우남·이자스민·민병주·강은희·김영록·김을동·고희선 의원 발의)
2월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최봉홍·정희수·박창식·김세연·김학용·김한표·유승우·홍문표·주영순·이완영·서용교·김경협·박대동·송영근·신의진·김재경 의원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황주홍·이상민·정성호·안규백·김우남·이낙연·유성엽·김동철·윤명희·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김관영·배기운·신기남·김춘진·한정애·박수현·박남춘·김장실·이강후·이노근·노철래·이언주·윤호중·김종훈·신학용·김동철·임수경·심윤조·유일호·최규성·박상은·유승우·우상호·강길부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김관영·배기운·신기남·김춘진·한정애·박수현·박남춘·김장실·이강후·이노근·노철래·이언주·윤호중·김종훈·신학용·김동철·임수경·심윤조·유일호·최규성·박상은·유승우·우상호·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이철우·황진하·홍지만·김태원·김회선·정희수·이노근·강은희·권은희·조현룡·김도읍·안효대·박상은·강석호·이명수·김태흠·김영우·신의진·이장우·김을동·류지영·박인숙·한기호·이에리사 의원 발의)
2월 1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양승조·박수현·김형태·변재일·문정림·이종걸·박완주·윤관석·박민수·장병완 의원 발의)
2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이노근·정문헌·정희수·김태원·한선교·박인숙·이에리사·이이재·이장우·함진규·이헌승·김태흠·이재균·김관영·정몽준·강은희·정수성·김한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이노근·정문헌·정희수·김태원·한선교·박인숙·이에리사·이이재·이장우·함진규·이헌승·김태흠·이재균·김관영·정몽준·강은희·정수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권성동·김회선·김희정·민홍철·신의진·원유철·이장우·이철우·정문헌·조해진·진영·황영철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권성동·김회선·김희정·민홍철·신의진·원유철·이장우·이철우·인재근·정문헌·조해진·진영·황영철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정호준·이상직·배기운·홍종학·정성호·김재윤·정청래·전해철·김용익·한명숙·김성주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김한길·우윤근·홍종학·배기운·민병두·김성곤·이낙연·김동철·이인영·최민희·진성준·최원식·배재정·정성호·주승용·추미애·신장용·윤관석·김영환·홍의락·신경민·도종환·유성엽·설훈·문병호·정호준·김민기·이언주·우원식·전정희·이찬열·김윤덕·김재윤·노영민·부좌현·문희상·안민석·노웅래·정청래·이춘석·황주홍·조정식·서영교·김영록·김진표·박병석·박영선·남인순·한명숙·이원욱·문재인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정호준·이상직·배기운·홍종학·정청래·김용익·한명숙·우윤근·김영록·강기정·배재정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1980년 해직공무원 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유기준·유승우·한기호·강동원·박인숙·유재중·이진복·이헌승·서병수·이에리사 의원 발의)

2월 1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김태원·이한성·한선교·박인숙·강은희·이낙연·정희수·민현주·이노근·이명수 의원 발의)

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강기정·최재성·배기운·임수경·서영교·김태년·신장용·조정식·박홍근·김동철·한명숙·윤관석·백재현·양승조·김광진·김우남·홍종학·안민석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강기정·배기운·임수경·신장용·조정식·박홍근·김동철·한명숙·윤관석·백재현·박완주·양승조·김우남·홍종학·안민석·박혜자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김재경·신경림·강기윤·신성범·권성동·여상규·주영순·유성엽·최봉홍·김춘진·김태환 의원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양승조·박남춘·박홍근·김용익·조정식·전병헌·백재현·김성주·박완주·배기운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정호준·이상직·배기운·홍종학·정성호·김재윤·정청래·유기홍·신장용·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오제세·배기운·이찬열·최재성·전병헌·최원식·윤관석·이강후·민홍철·김재윤·서기호·유성엽·남인순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한명숙·강기정·김경협·김동철·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진표·김태년·김한길·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박남춘·박주선·박홍근·배기운·배재정·백군기·백재현·부좌현·설훈·송호창·신기남·신장용·심상정·유기홍·윤호중·은수미·이미경·이석현·이인영·이종걸·이해찬·인재근·임내현·장하나·정호준·조정식·최동익·최민희·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이한성·김상훈·서용교·노철래·유승우·유성엽·김춘진·이노근·조명철·이명수 의원 발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이한성·이만우·박인숙·문정림·서용교·이노근·조명철·이명수·정희수·김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문병호·박수현·윤관석·최원식·신학용·전순옥·우원식·김기준·임수경·이종걸 의원 발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최민희·윤관석·신경민·유성엽·도종환·배기운·김기준·김성주·전정희·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임수경·김우남·이찬열·김재윤·김미희·김관영·배재정·이춘석·박남춘·남인순·문병호·박홍근·전순옥·최재성·서영교·전정희·김태년·이원욱·정성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임수경·김우남·이찬열·김재윤·김미희·김관영·배재정·이춘석·박남춘·문병호·박홍근·전순옥·최재성·서영교·김태년·이원욱·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이재영·박성호·홍지만·김장실·노철래·홍문종·염동열·김을동·이자스민·박대동 의원 발의)

2월 1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정호준·이낙연·이상직·배기운·은수미·심재권·홍종학·정성호·신장용·김용익·한명숙·김성주 의원 발의)

2월 1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김현·김태년·이석현·이찬열·백재현·김용익·문희상·이해찬·유대운·박남춘 의원 발의)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개선 촉구 결의안

(2013. 2. 12 심재권·김성곤·우상호·김영록·김기준·인재근·김영환·배기운·유인태·정청래·김상희 의원 발의)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3. 2. 12 정문헌·김영우·윤상현·조명철·원유철·심윤조·황진하·정의화·김기현·김을동·김명연·서상기·김도읍·서용교·김기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3. 2. 12 국방위원장 제출)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인사청문요청안

(2013. 2. 12 대통령당선인 제출)

2월 12일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박수현·신장용·배기운·김현미·양승조·이미경·이석현·윤관석·전해철·김태년·장하나·최민희·임내현·우원식·민홍철·정청래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함진규·홍문표·김태호·조정식·황진하·이재영·이장우·박수현·문병호·민홍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서기호·정진후·박원석·김제남·심상정·노회찬·강동원·오제세·강기정·이상직 의원 발의)

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정성호·배기운·추미애·이만우·이낙연·정청래·홍종학·윤관석·최재성·신장용·김태년 의원 발의)

2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김상희·김윤덕·이상규·김미희·우원식·김성곤·조정식·윤관석·이해찬·배기운·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김상희·김윤덕·이상규·안규백·김미희·우원식·김성곤·조정식·윤관석·이해찬·배기운·이찬열·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김성곤·김춘진·주승용·강창일·김현미·정의화·김영우·안민석·설훈·조명철 의원 발의)

2월 14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요구안

(이상 2건 2013. 2. 13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13. 2. 14 의장 제의)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2일간)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대안)

(2013. 2. 13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문병호 의원 발의)

(2012. 7. 24 문병호 의원 외 126인 발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2. 9. 18 조해진·이재영·이완영·박민식·김태흠·김영우·김학용·김도읍·이헌승·권성동·권은희·안덕수·김한표·이한성·.이만우·염동열·이우현 의원 발의)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2. 6. 21 박대출·류지영·이현재·이장우·신의진·김기현·김을동·김재경·이한구·나성린·윤상현·김기선·김희국·강은희·진영·박근혜·강석훈·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남북관계개선 촉구 결의안

(2013. 2. 12 심재권·김성곤·우상호·김영록·김기준·인재근·김영환·배기운·유인태·정청래·김상희 의원 발의)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3. 2. 12 정문헌·김영우·윤상현·조명철·원유철·심윤조·황진하·정의화·김기현·김을동·김명연·서상기·김도읍·서용교·김기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민홍철·배기운·김성곤·박수현·안규백·황주홍·백재현·양승조·최원식·문병호 의원 발의)

2월 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관련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서면질문서

(2013. 2. 12 김상희 의원 제출)